

철원 동송 국도 확·포장 30년만에 결실

【철원】철원·동송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도 87호선(오지·동송) 4차선 확·포장 사업이 내년 정부예산에 최종 반영됐다.

7일 철원군에 따르면 동송읍 오지리~이평리 간 국도 87호선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2016~2020년) 계획에 신규 반영된 후 처음으로 내년 정부예산에 설계비 5억원이 반영됐다. 이 사업은 연장 3km를 4차

오지리~이평리 3km 구간

내년 정부예산 최종 반영

국토부 설계비 5억 투입

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2억원이다.

당초 국도 87호선 확·포장 사업은 우선순위가 낮고 정부의 SOC 사업 축소 기조에 따라 내년도 국비 반영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현중 군수와 황영철(자유한국당·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국회의원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 끝까지 설득해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SOC 현안사업인 이 사업은 철원·동송읍 주민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요 도로다. 교통량에 비해 차선이 협소해 1990년대부터 30여년째 국토교통부 등에 확·포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정국기자

동해·삼척 주요사업 국비 3000억 확보

콜드체인 허브 구축 75억 반영

석탄비축사업 재개 등 숙원 해결

콜드체인 허브 구축 사업 등 동해와 삼척지역 주요사업에 3000억원 대 국비가 확보,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7일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동해·삼척)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동해 콜드체인 허브 구축사업

75억원, 삼척항 친수시설 조성사업 25억원이 반영,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또 총 사업비 78억원이 소요되는 동해항 남부두 임항장교 건설 사업에 실시 설계비 3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200억원 규모의 장호항 보수정비 사업도 기본 설계비 5억원이 반영됐으며, 28억원 규모의 삼척 국유림 관리소 장비고도 신설사업에 대한 설계비 1억8000만원도 확보됐다.

석탄비축사업도 10억원의 예산이 확보, 지난 2000년 이후 18년만에 석탄비축이 재개된다.

특히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은 당초 문화체육관광부가 10억원을 편성했지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5억원을 증액, 최종 15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에서 빠져있던 군 해안철책 철거 예산도 57억원이 확보됐다.

이밖에도 △동해항 3단계 개발 1358

억원 △동해-목호항 환경개선 60억원 △동해항 북부두 개축 45억원 △동해-옥계 국도건설 157억원 △삼척~포항 철도건설 1246억원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 161억원 등도 반영됐다.

이철규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동해의 콜드체인 허브 구축사업, 삼척 석탄비축사업비가 반영돼 지역 숙원사업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홍성배 sbhong@kado.net

13일 강원경제인 송년음악회

강원경제인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가 오는 13일 춘천에서 열린다. 강원경제단체연합회(회장 최근진)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강원경

제인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를 연다. 이번 음악회는 강원도립예술단의 오프닝공연을 시작으로, 상임지휘자 운승관이 지휘하는 호반윈드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비롯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입장료는 무료다. 신관호

“발주처 갑질, 근본 해소책은 적정공사비”

국회 정책토론회 열려… 공사비 산정제도 개선 촉구

공공부문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공발주 건설공사 갑질 실태와 대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개선 방안’이란 발제에서 공공공사의 발주, 입찰, 계약, 시공, 준공 단계별로 이뤄지는 불공정 행위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김영덕 연구위원은 “시공 단계에서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를 가장 많이 경험해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발주자가 당초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공사 또는 업무를 지시할 경우 시공자의 비용 청구와 보상을 인정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발주기관 불공정 행위의 근본적 원인은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제도 때문으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단기적 공사비 절감 기조에서 총사업비를 최종 준공까지 준수하는 것으로 관리 목표를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서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요즘 건설업계는 수주 물량과 공사비 부족에 불공정 행위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공공공사를 수주하면 기쁨은 1시간에 그치고 그 이후는 고통의 연속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고, 발주기관의 간접비 포기 각서 요구 등은 온갖 불공정 행위로 공사를 계속하자니 손해를 봐야 하고, 포기하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기 때문”이라며 “저가 낙찰을 유인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비 과소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수형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장은 “시공단계 포기 각서를 없애는 등 내부적으로 불공정 행위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과거의 현장 관리기준을 반영하거나 설계변경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건설사의 잘못된 관행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불공정 행위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적정 공사비와 관련, 내년 2월쯤 기획재정부와 함께 계약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희찬기자 chc@

동해안 3단계, 당진·평택항 진입도 등 주요 SOC ‘청신호’

강원 5조325억

올림픽 시설물 사후활용 예산 등 현안사업 대거 빠져

강원도는 2018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 국비 5조325억원을 확보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포항~삼척 철도 1246억원, 동해항 3단계 개발 등 항만개발 2194억원 등 9501억원을 확보했다.

폐광지역 및 관광개발사업 596억원 등 문화 관광 체육 및 폐광지역 개발 분야 869억원과 문화 및 체육진흥 분야 273억원,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1991억원도 확보했다.

농산어촌 개발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발전사업에도 5561억원을 투자하

며, 민생 안전 및 국민 안심 분야에도 3조 5103억원을 투자한다.

하지만 현안 사업들이 대거 빠지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물 사후활용 관련 예산이 빠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올림픽플라자 유산 조성사업, 가리왕산 산림생태 복원사업 등이 최종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교통망 확충·건설 경기 위축도 불가피해졌다. 열악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 강릉~제진 철도, 제천~삼척 고속도로, 춘천

~철원 고속도로 사업을 내년 신규 사업으로 정부에 요청했지만, SOC 예산 감축 기조로 모두 제외됐다.

이런 가운데 제2경춘국도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비 2억원과 동서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설계비 100억원 증액으로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발판은 마련했다.

장대터널 재난 대비 특수차량 보강(인제·평창),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속초·고성·양양), 국립산림복지단지 시범모델 유치(홍천) 등 각 지역 현안사업 예산 확보는 불발됐다.